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39
----------	-------

발의연월일 : 2022. 11. 1.

발 의 자 : 김선교 · 성일종 · 김예지
조수진 · 김상훈 · 조경태
장기윤 · 이현승 · 김정재
박대수 · 김석기 · 권명호
정경희 · 양금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신당역 스톱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톱킹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스톱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기관 등 직장 내 스톱킹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치 등을 마련하여 스톱킹 방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톱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톱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장은 스토킹 사건 담당자 등에게는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5조).
- 라. 스토킹 사건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6조).
- 마.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6조).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8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 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

력체계의 구축·운영

6.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7. 피해자의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체계의 구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스토킹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킹 예방지침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3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지침 및 재발방지대책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스톡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톡킹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톡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4.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5.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스토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7.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9.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1조(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사기관의 협조)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

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범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범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스토킹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범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범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범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범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①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스톡킹 사건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